

한국 현대정치의 근본언어:

망국 · 개조 · 선진국의 담론

강 정 인 | 서강대학교

정 승 현 | 서강대학교

이 논문은 서구 중심주의의 분석틀에서 벗어나 '문제의식의 한국화'라는 관점에서 해방 이후 한국 현대정치를 개념화하려는 글이다. 필자들은 한국의 정치현실을 움직이고 만들어낸 독특한 정치언어를 '망국'의 수사로 규정하고 위기의식의 주입, 위기의 해결 방안, 위기극복 이후 한국의 미래상 제시라는 순서로 전개되는 망국담론의 기본 틀을 '망국' · '개조' · '선진국'으로 요약하였다. 그리고 이 담론이 박정희 ·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과 21세기 한국 보수주의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검토하며, 망국이라는 위기의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국정치의 부정적 · 긍정적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국권상실 · 분단 · 전쟁을 겪으며 한국인의 뇌리에 확고하게 각인된 '생존'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표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만들어진 한국정치의 구체적 양상과 정치언어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민주화 이후의 역대정권, 그리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 현대정치의 사상화 작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주제어: 망국, 개조, 선진국, 권위주의, 보수주의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8-B00024).

I. 한국 현대 정치언어의 분석: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들어가는 말

사상은 ‘개념으로 포착된 그 시대’라는 말이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이 말을 ‘시대의 흐름, 전개, 결과를 일정한 인식 틀에 따라 포착함으로써 개념적 일관성을 부여하고, 그 전개 과정에서 해당 공동체가 겪었던 역사적 경험을 반성하면서, 다음 시대에는 보다 발전된 형태로 계승하는 작업’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한국의 정치사상 연구자들은 현대 한국정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를 극복하거나 타개하기 위한 이론적 논변이나 사상적 비전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사상 연구자들은 현대 한국정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보다는 서구 정치사상이 다루는 추상적 개념, 예컨대 정의·공동체·자유 등의 연구에 몰두한 경향이 있다.

물론 정치사상이 기본적으로 담론으로 구성되며, 담론의 중심축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이런 시도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고도 필수적이라고 하겠으나, 자신이 밭 딛고 서 있는 시공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외면하고 서구정치사상의 문제 틀에만 함몰된다면, 한국의 정치현실에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자 중의 한 명은 일련의 글을 통해 서구 중심주의에 갇힌 한국 정치사상 연구가 당면한 문제점을 학문적 문제의식의 서구화, 서구 이론에 따른 한국 현실의 동화주의적 해석, 한국 현실의 주변화, 학문의 서구 종속성이라는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강정인 2004).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문제의식의 한국화, 서구이론에 따른 동화주의적 해석의 거부, 한국현실의 중심화를 내세웠다(강정인 2007).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또 한 명의 필자와 함께 ‘문제의식의 한국화’를 구체적으로 시도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는 서구의 개념들을 빌려오더라도 문제의식을 한국의 현실 속으로 불러들여 재활용·혁신하려는 작업을 말한다. 다른 한편 그것은 서구에서 찾기 어려운 한국의 독특한 정치언어나 심성을 포착하고, 그 언어와 심성이 한국정치를 규정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밝힘으로써,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사상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필자들은 그 출발점으로서 한국의 현실정치는 물론 한국인 일반 사이에서 정치사회적 문제를 논할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망국’담론의 발화자, 그 정

치적 효과, 사용 의도, 그 담론이 만들어내는 한국정치의 특수한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2. 망국의 수사

근대 이후 산업화·복지국가·분단 극복·민주주의의 심화를 지향하면서 근본적 변화를 겪어 온 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사상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당대의 시급한 문제와 대면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현실에서 사용되는 가장 근원적인 언어, 한국 사회구성원의 삶과 연계되어 한국 현대정치를 움직여온 근본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계속 활용하여 한국의 정치현실의 틀을 지탱하고 그 밑에서 저류(低流)로 흐르고 있는 근원적 언어를 ‘망국’으로 규정하고, ‘망국담론’의 생산자로서 박정희·전두환 권위주의 정권과 2000년 이후 한국 보수주의의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들이 ‘망국’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는 큰 원인은 대부분의 한국인이 정치사회적 문제를 논할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동원하는 일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이다. 망국이란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한다는 뜻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최고의 위기국면을 말한다. 물론 한국의 현재 상황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그동안의 발전상에 비추어 볼 때 구한말처럼 우리가 국권을 상실할 위기에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정치사회 문제를 논할 때 정치인·일반인·학자를 가리지 않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수사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망국의 논리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참 쟁점이 되는 세종시, 4대강 개발사업 등의 사례를 보면, 해방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라가 망한다’는 망국의 수사가 얼마나 폭넓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다.²⁾

현재 망국이라는 단어나 그것을 활용한 수사를 가장 많이 동원하는 집단은 보수주의자들이며 보수 월간지 『한국논단』에는 제목에 망국을 달거나 망국의 수사를 활용하는 글들

- 1) ‘망국’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망국의 전야’, ‘국가홍망’, ‘국가생존의 위기’ 등의 말로 위기의식을 환기시키는 경우에는 ‘망국 수사’로, 이 표현법을 사용하여 일관된 내용을 서술하는 경우는 ‘망국담론’이라고 표현했다.
- 2) 2009년 9월 7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행정도시, 망국의 길로 가는 대재앙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했다. 반대 입장에 있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2010/1/18)’이라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2010년 1월 13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앞에 라이트코리아, 6·25 남침피해유족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세종시 원안은 망국적 수도 분할’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4 한국정치연구 제20집 제3호(2011)

이 매월 게재된다. 그렇다고 망국이 보수주의자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각종 사회문제나 정치현안을 놓고 망국의 수사를 동원하는 광경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고스톱 망국’, ‘서울대 망국’, ‘망국의 사교육’, ‘망국의 사치병’, ‘망국적 지역감정’ 등 망국이라는 제목을 단 글들은 진보와 보수, 쟁점과 의제를 가리지 않고, 또 신문과 개인 블로그 등 매체를 넘나들며 등장한다.

이처럼 여당과 야당, 진보(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편이기는 하지만)와 보수에서 정책의 경중을 불문하고 ‘망국’이라는 단어가 동원되는 것은 상대방의 명분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망국’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두려움과 욕망을 들춰내며 행동과 이념의 일탈 한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주장에 ‘애국’이라는 장중한 수사학적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동원을 쉽게 해주는 데 대단히 유용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런데도 학문적 분석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상의 언어’처럼 보이고 그렇게 취급되어 왔다는 점은, 한국 사회구성원의 삶과 연계되어 한국 현대정치를 움직여 온 중요한 근본 언어가 그 정치적 함의가 밝혀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필자들은 이것을 서구 정치사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의식의 한국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정치적 함의를 밝히는 것이 한국 정치현실의 사상화 작업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3. 주제와 범위

망국이라는 단어가 진보와 보수, 야당과 여당, 정치권과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애용되는 이유는 그 단어에 우리들 자신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3·1절·광복절 등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있는 기념일에는 ‘망국의 한’ ‘나라 잃은 설움’이라는 구절이 빠지지 않고, 현충일·6·25·국군의 날 등 북한과 관련되는 기념사에서는 ‘국가 생존의 위기’라는 말이 항상 등장한다. 이 수사를 체계적으로 유포시킨 장본인은 역대 정권, 대중매체, 공식 교육과정이며 현재 가장 빈번하게 동원하는 집단은 보수주의자들이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대통령 연설·담화문, 공식 교육과정, 언론, 대중매체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을 반복하는 데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망국의 수사를 활용한 위기의식의 주입과 국민동원을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대 대통령의 연설·담화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현재 가장 강렬하게 주장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표현이나 수사법이 유

사하다고 해도 동원되는 단어, 논리구조, 목적, 국가위기의 원인 규정 등에서는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 이후의 정권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와 대통령에 따라 달라지는 망국담론의 내용을 비교하는 작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하나의 글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과제이다. 따라서 필자들은 일차적으로 망국담론의 ‘원형’을 만들었던 박정희·전두환 권위주의정권의 연설·담화, 그리고 이것을 현재 가장 가깝게 계승하고 있는 2000년 이후의 한국 보수주의에 한정하고자 한다.³⁾ 그리고 두 권위주의 정권이 망국·국가위기·국난의 수사법을 동원한 목적은 무엇이고, 21세기 한국 보수주의에게 어떤 형태로 계승되고 있는지, 이 수사법은 각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II. 망국의 의미와 담론의 짜임새

1. 망국의 의미

망국을 글자 그대로 풀자면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지만 역대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일제강점기의 기억을 환기시키며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국권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1960년대 이후 한국인에게는 이런 식의 위기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는 못했지만,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는 수사법으로는 대단히 자주 등장한다.

둘째, 북한과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적화’ ‘패망’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식의 망국 수사는 박정희 정권에서 가장 흔하게 동원되었으며, 전두환 정권도 그에 못지않았다. 민주화 이후 역대정권들도 안보태세의 강화를 역설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남북한의 격차가 월등해진 90년대 이후,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남북협력 기조 아

3) 망국담론의 원형을 만들었던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의미에서 이승만 정권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당시에는 ‘망국’, ‘위기’라는 말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업의 범위를 한없이 늘려 놓는다. 더욱 중요한 점은 치열한 좌우대립과 전쟁이라는 말 그대로 국가존망의 위기를 겪은 정권의 위기담론과 가상의 위기를 ‘망국’으로 호명하는 이후의 권위주의 정권의 담론들이 지닌 차별성에 있다. 양자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별도의 작업을 요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래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두 정권 아래서 이 수사법은 보수주의자들의 전매특허가 되어 진보진영을 ‘좌파’이자 ‘망국세력’이라고 비판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셋째, ‘국제경쟁에서 패배·낙오·추락’, ‘선진국 진입의 실패’라는 뜻이다. 겉으로 드러난 의미로만 보자면 국권상실이나 적화패망보다는 위기의식의 강도가 떨어지지만 결국 ‘국력강화’의 실패, 후진국으로의 후퇴, 국제경쟁에서의 패배, 강대국의 먹잇감으로 전락이라는 그림을 연쇄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망국이라는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수사법은 박정희부터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과 2000년 이후 보수주의자들에게 아주 빈번하고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넷째, 어떤 사회문제, 사회풍조, 정치문제 때문에 나라가 분열하고 국민정신이 타락하여 결국 국가 존망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뜻이다. ‘사치는 망국병’ ‘망국의 지역감정’이라는 말에서 보듯 정치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망국과 연결시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그 해결의 시급함과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분석적으로는 허술하지만 이런 식의 용법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으며, 박정희 정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2. 망국담론의 짜임새

망국 혹은 국가생존의 위기 등의 수사법을 동원한 담론은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망국·개조(개혁)·선진국이라는 삼단 구조를 갖고 전개된다. 첫 단계는 망국·추락·낙오라는 단어들을 동원하여 위기의식을 부풀리며 시작한다. 대통령의 연설·담화와 보수주의에서 그 위기의식은 크게 나누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다’, ‘경쟁상대 혹은 주변국들에게 추월당해 2류국으로 전락한다’는 두 종류로 나타난다. 이렇게 일단 위기의식을 주입한 후에는 위기 극복의 담당자로 자신을 등장시키며 정당성을 확보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망국을 초래한 대내외적 원인이 제시된다. 대외적 원인으로는 북한의 ‘남침야욕’, 심각한 국제 정치·경제환경,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조건 등이 지적된다. 대내적으로는 전임 정권을 이끌었던 정치세력과 잘못된 정책, 누적된 사회모순, 자신의 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세력,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풍조, ‘국민정신’ 등 다양하게 제시된다. 또한 ‘지금 당장 망국’과 ‘앞으로 곧 망국’ 등의 수사법을 활용하여 위기의식의 강도를 조절한다.

결론부에는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구국’의 방안이 ‘혁명’ ‘개혁’ 혹은 ‘국가개조’라는 이름으로 제시된다. 박정희의 ‘조국근대화’, 전두환의 ‘정의사회’, 김영삼의 ‘신한국’, 김대

중의 ‘제2건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대국’ ‘선진조국’ ‘경제강국’ ‘고도산업국가’ 등의 이름으로 국가생존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력경쟁에서 승리한 한국의 미래상이 나타난다. 정치적 효과의 측면에서 망국담론은 사회 전체에 위기의식을 주입함으로써 정권이나 이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스스로를 국난 극복·구국의 영웅 등으로 격상시킴으로써 명분을 선점하며, 상대방의 반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III. 박정희 정권의 망국담론

1. 망국의 위기에서 일어서다

박정희는 임기 내내 망국의 위기의식을 고취하였으며, 특히 5·16, 3선개헌, 유신정권수립 등 비정상적으로 정권을 잡은 시기에는 자신의 집권을 망국의 위기의식과 결합시켰다.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그 비장한 각오를 밝혔듯 그에게 5·16은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실로 민족사활의 판가름을 짓는”, “사생결단의 순간(박정희 1962, 13)”에 놓인 조국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1969년 「삼선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에서는 만일 1970년대를 성공적으로 보내지 못하면 “다시 1950년대의 혼란과 불안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문집 3』, 586)” 것이라면서 5·16 이전의 ‘국가존망의 위기상황’을 환기시켰다. 10월유신을 위한 「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특별담화문(1972)」에서는 유신이 “민족의 생존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과업 … 한마디로 말해서 구국의 대과업(『문집 4』, 307)”이라고 강변하였다.⁴⁾

그가 망국, 생존을 언급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 취임식은 아무 경쟁자도 없었고 극도의 정치탄압으로 모든 반대를 질식시켰던 1978년 12월의 9대 대통령 취임식뿐이었다. 그렇지만 사회의 저항이 거세지고 노동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자 어김없이 위기를 들고 나왔다. “최근 우리의 주변 정세는 … 흡사 열강이 각축하던 한말의 소용돌이를 방불

4) 박정희의 연설·담화문은 1968년까지는 『박정희대통령선집』(총 9권)을 이용하여 『선집』으로 표기하였다. 그 이후의 연설문집은 6대·7대·8대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 연도별로 나누어져 있는 두 종류를 사용했다. 1969년부터 1977년까지는 앞의 형태로 출간된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을 사용하여 『문집』으로 표기하였다. 1978·79년은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15권, 16권을 사용하여 『연설문집 15』라는 식으로 표기했다.

케 하는 상황(『79년 3·1절 경축사』, 『연설문집 16』, 95), “유례없이 비상한 시국이요 위기에 찬 상황(『79년 제헌절 경축사』, 같은 책, 138), “방심을 불허하는 이중 삼중의 비상한 시국(『79년 광복절 경축사』, 같은 책, 147)”이라면서 국가위기를 강조했던 것이다.

2. 망국의 위기의식 환기

박정희가 망국과 관련된 위기의식을 불어넣는데 사용하는 수사법은 크게 나누어 ‘구한말의 위기’, ‘6·25 전야’, ‘국력경쟁에서의 낙오’라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데는 앞의 두 수사법이 단연 으뜸인데, 특히 3선개헌이나 10월유신 등 자신의 비정상적인 권력장악과 관련하여 동원되었다. 이에 비해 ‘낙오·추락·주저앉기’는 상황이나 문제의 비중과 관계없이 각종 연설이나 담화문에서 제일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구한말의 위기’ 수사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경우는 1965년의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한 담화문』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쏟아지는 비판에 맞서 한 나라가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하려면 국제정세와 세계조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거나 역행하면 “어떠한 불행은 가져오고야 말았는가 바로 이조 말엽에 우리 민족이 치른 뼈저린 경험이 실증(『선집 4』, 338)”하고 있다면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구한말의 정세에 빗대어 정당화 시켰다. 이 수사법은 그 후에도 계속 국제정세의 위협을 환기시킬 때 동원되었지만 특히 10월유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유신정권 수립을 위한 ‘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특별담화문(1972)』에서부터 그의 마지막 저서 『민족중흥의 길(1978)』까지 일관되게 유신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70년대 초 우리나라 사정은 … 1세기 전 구한말 당시의 그것과 비슷했다. … 70년대에 일어난 국제정세의 격변을 눈앞에 보면서 나는 불행하게도 이 땅에 그 쓰라린 역사의 전철이 되풀이되는 징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박정희, 2005: 258)”는 것이었다.

‘구한말의 위기’만큼이나 공포를 불어넣은 것은 ‘6·25 전야’이다. 이 수사법 역시 60년대부터 일관되게 나온다. 그가 5·16의 명분을 ‘북괴의 남침’에서 찾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60년대 내내 각종 연설에서도 지속적으로 남침의 위협을 상기시켰으며, 70년대에 들어서도 각종 비상수단을 옹호하는 데 이 수사법을 적극 활용했다. 특히할 것은 5·16 직후에는 당시 상황을 ‘남침 전야’에 비유했고, 민정이양 이후 5·6대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1960년대에는 ‘언제라도 남침 가능성’을 강조했으며, 3선개헌 이후에는 ‘앞으로 몇 년’하는 식으로 북한의 남침 시점을 명시한다는 점이다. 1969년에는 막연히 ‘70년대’를, 1970년 연

두기자회견에서는 ‘70년대 전반’, 3선개헌 이후 대통령 선거(1971년) 연설문(총 10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앞으로 3, 4년’, 1971년 신년사에서 ‘앞으로 2, 3년’, 유신정권 수립 이후 1974년에는 ‘앞으로 4, 5년’으로 잡고 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다.

한편,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생존경쟁의 시대에 힘없는 민족 혹은 국력을 신장시키지 못하는 나라는 세계무대에서 영원히 낙오한다는 국제경쟁에서의 낙오·추락·주저앉기 수사법은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조차 없다. 박정희는 임기 내내 수출의 날, 저축의 날, 국군의 날, 전국체육대회 등등 어느 행사에서나 수출시장은 전쟁터, 세계는 국가이익의 전쟁터, 저축은 국제경쟁의 원동력이라는 식으로 경쟁이나 전쟁의 단어를 동원하고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낙오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이 수사법 역시 자신의 비정상적인 권력장악을 정당화하는 데도 유용한 역할을 했다. 3선개헌 이후 제7대 대통령 취임사(71/7/1)에서는 “우리는 또 다시 세계사의 일대 전환기에 처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국력을 기르지 못하면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들은 영영 낙오자가 되고 만다(『문집 4』, 5)”고 선언했다. 또한 유신정권 수립을 위한「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특별담화문(72/10/27)」에서도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국력 강화와 국력의 조직화에 실패하면 “우리는 영원히 세계사의 진운에서 낙오하고 말 것(『문집 4』, 306)”이라고 강조하였다.

위의 세 가지 수사법을 하나로 묶은 종합판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힘의 다극화 현상, 중소분쟁 및 위성국들의 자주노선으로 인한 공산권 내부의 분열, 각국의 실리 추구 등으로 인해 ‘앞으로 10년’은 “대단히 중요한 연대”이며, 여기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국가나 민족은 70년대 말기쯤 가면 아주 툭 떨어져서 낙오”할 것이고, “이 70년대라는 것은 마치 지금부터 1세기 전 19세기 말엽에 우리나라의 정세 또는 국제정세와 비슷한 점이 있다(『문집 3』, 664)”는 1970년 1월 9일 연두 기자회견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3. 망국의 원인과 치유방법

박정희는 망국의 원인으로 국제적 요인,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국내적 요인을 들고 있다. 박정희가 꼽는 국가생존의 국제적 요인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핍박과 침략이었다. 그는 『국가와 혁명과 나(1963)』부터 집권 말기인 1978년 1월의 연두기자회견까지 “우리는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역사상 외부의 적으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국난을 당한 민족(『연설문집 15』, 18)”이라고 계속 강조했다. 물론 이런 연설의 뒤에는 ‘수난과 침략을 면하려면 강력하고도 역센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항상 따르고 있다.

또 다른 망국의 요인은 주변국 혹은 세계 다른 나라들은 모두 발전하는 반면 한국은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국력 신장에 실패하거나 발전추세에 뒤쳐지는 것이다. 망국담론을 자유자재로 동원하여 자신의 주장과 정책을 정당화하는 부분도 바로 이곳이다. 박정희가 망국의 내적 요인으로 지목한 것은 국내 정치, 특히 자신에 대한 반대자와 국민의 ‘국적 없는 정신상태’이다. 박정희의 국내 정치, 정확히 말해 야당과 민주화세력에 대한 비판은 너무 진부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민정신의 개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내부 원인으로 박정희가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취급했던 것은 국민의 ‘정신상태’였다. 근대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확립이나 기존제도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근간은 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다. 쿠데타 직후부터 1978년 죽기 전까지 임기 내내 그는 정신혁명을 강조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의 내핍정신·근검절약·근로의욕·저축심·협동과 단합·자주정신·민족의식·개인보다는 민족을 우선하는 정신·적극성 등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1960년대의 박정희는 민족의 체질개선을 ‘인간개조와 민족개조의 민족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거의 모든 연설과 담화에는 ‘국민도덕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다’는 말을 빠트리지 않았다. 쿠데타 직후에 출간된 저작 『국가와 혁명과 나(1963)』, 『우리 민족의 나갈 길(1962)』에서부터 그는 한민족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체성을 상실한 채 의타주의, 무기력, 나태의 ‘망국적 국민성’에 빠져 있었다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5.16을 “정신적으로 주체의식의 확립 혁명 … 국가의 재건 혁명이자 인간 개조 … 국민개혁 혁명 … 민족의 영구 혁명(『선집 3』, 21)”으로 규정한 것도 그에게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을 리 없었다. 개개인의 정신적 주체성과 ‘민족 주체성’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또한 “나를 확대한 대아가 조국ियो 또 민족(『70년 연두기자회견』, 『문집 3』, 688)”, “국가는 민족의 후견인(『73년 연두기자회견』, 『문집 5』, 53)”이라는 발언들은 개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국가주의 논리였다.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생존이 더 우선(『79년 연두기자회견』, 『연설문집 16』, 48)”이라는 발언은 국가위기 앞에 개인의 자유를 유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로 활용

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1970년대에 들어서며 박정희는 ‘사회의 윤리와 도의 재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풍조나 정신상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사회정화운동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1971년 「5·16 10주년 기념사」에서는 낭비와 사치, 안일과 타성을 ‘폐풍’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일소하기 위한 운동을 사회정화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후 망국을 초래하는 ‘폐풍’의 목록에는 여러 가지가 추가된다. 73년 연두기자회견에서는 “나라가 잘못되어도 나만 잘 되겠다 하는” 사고방식에 대하여 “나는 이것을 망국근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문집 5』, 21)라고 했으며, 1975년 연두기자회견에서는 ‘부정, 부패, 비위(非違), 부조리 등 사회악’을 목록에 추가했다.

이 목록은 점점 확대되어 정치적 불안, 사회적 혼란, 국론 분열, 사회기강의 해이, 야당과 민주화 세력의 반발에서부터 ‘사회기강을 해치고 국민정신을 쪼먹는 저속하고 퇴폐적인 일부 대중예술’까지 모조리 포함시켰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생활, 사치 또는 비생산적인 일부 국민들의 생활 태도, 고유 미풍양속을 해치는 퇴폐풍조, 시국을 망각한 폭리·탈세·밀수·위장이민 등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문제 전체가 “국민의 총화를 해치는 망국적인 부조리 현상”(76년 연두기자회견, 『문집 6』, 28)이라고 규정되었다. 한마디로 사회의 소소한 모든 것까지 박정희 정권에서는 망국이라는 국가 최대의 위기와 결부되어 국가권력의 개입 범위와 강도는 한없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국민이 ‘조국근대화’의 역사적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격려·감시·지도·편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민과 ‘더불어’ 민주정치를 펼쳐나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4. 미래의 모습

박정희는 늘 자신을 망국의 위기에 있는 조국을 구출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렇다면 박정희에게 망국·낙오·추락의 반대는 무엇인가?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오늘날 문명이라고 하면 그 척도는 어디까지나 서양문명이라는 것을 두고 말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박정희 1962, 139)”고 한 데서 보듯 박정희를 비롯한 당시의 거의 모든 한국인에게 선망의 대상은 서구였고 국제경쟁에서의 승리와 국력 강화는 곧 서구식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의미했다. “지금 이 세대에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서 우리 다 같이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 세대에 우리의 조국을 근대화해서 선진 열강과 같이 잘 사는 나라

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선집 1』, 339)”이라는 1968년 한글날 담화문은 당시의 한국인에게 분명히 일정한 호소력을 갖고 있었다. 박정희가 제시하는 미래의 발전상 역시 이 선진국의 모습을 다양하게 풀어낸 것이었다.

박정희가 제시하는 미래는 ‘선진공업국가’, ‘복지국가’, ‘세계사의 주류가 되어 세계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나라’로 요약된다. 선진국의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1인당 소득이나 수출액 등의 수치를 부각함으로써 양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고유의 미풍양속’ ‘건전한 도의’가 동반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른바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강조했다. 1966년 연두교서에서는 제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70년대 후반기 한국의 모습을 “소비가 미덕이라는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풍요한 사회(『선집 5』, 35)”라고 규정했다. 1970년 광복절 축사에서는 서기 2000년 한국의 미래상을 ‘통일을 이룩한 지 이미 오래 된 민족국가’, ‘온 국민이 다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풍요한 선진복지국가’, ‘세계사의 주류에 당당히 참여하고 기여’하는 나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9대 대통령 취임사(78/12/27), 마지막 연두기자회견(79/1/19)에서도 ‘고도산업국가’, ‘번영과 풍요 속에 인성과 의리가 넘치는 복지사회’를 80년대 중반 미래 한국의 모습으로 제시했다.

IV. 전두환 정권의 망국담론

1. 망국의 위기에서 일어난다

전두환 역시 자신의 집권을 망국의 위기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한다.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 「국보위 분과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훈시(80/6/5)」에서 “지금 우리를 에워싼 국내외 정세는 건국 이후 가장 어려운 격동 속에 있다”고 하며 10·26 이후의 정국을 “국가차원의 생존여부가 걸린 국면(『문집 1』, 399)”, ‘국가 침몰의 위기’, ‘국가 존망의 위기’ 등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198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80/10/30)」에서도 “10·26 사태 이후 지난 1년간”을 “국가존망을 가름하는 격동과 시련”으로 규정하고 자신은 “국정전반에 걸친 구국적 일대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문집 1』, 102)한 인물로 부각시켰다.

제12대 대통령 후보 선거연설(81/2/10)에서는 자신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 일제통치의 압박 속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부모님을 따라 한때 만주땅까지 이주”하

여 “나라 잃은 백성들의 한과 설움”을 보았으며 “군인의 길을 걷게 된 것도 나라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겼던 어린 시절의 영향이 컸다(『문집 1』, 325)”고 어린 시절부터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삶 자체를 망국의 기억과 결부시켰다.

2. 위기의식의 환기

군사정변으로 집권하여 광주민주화항쟁을 겪고 등장한 전두환은 임기 내내 야당·민중화세력·학생 등의 반대에 시달렸다. 그럴 때마다 그는 위기의식을 환기시킴으로써 반대세력의 저항을 차단하고 자신의 강권을 옹호하고자 했다. 심지어 미국 방문 당시 워싱턴 교민에게 행한 연설(81/1/21)에서는 “국가의 침몰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할 때(『문집 1』, 282)”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나라가 ‘침몰’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묘사했을 정도다.

그렇지만 전두환은 ‘구한말의 위기 전야를 연상시킨다’는 식의 수사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임기 중 일련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구한말의 국권상실을 언급하였지만 그 결론은 ‘분열을 극복하고 국력을 하나로 모으자’는 정도로 그칠 뿐이었다. 그가 위기의식을 환기시킬 때 동원하는 담론은 ‘국제정세의 위기로 인한 위기’, ‘선진국 진입의 일대 고비’라는 두 종류의 수사법이었다. 그는 임기 내내 1980년대를 ‘격동’, ‘격변’의 시대로 묘사하였다. “각박한 주변정세와 갈수록 악화되는 세계경제 환경(『80년 개천절 기념식』, 『문집 1』, 73)”이라는 말에서 보듯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제경제의 악화가 그 원인이었다.

1980·81년의 전두환은 위기를 포괄적으로 묘사했다. 예를 들면 재일동포 신문 『통일일보』의 회견(81/1/1)에서는 ‘세계적으로 80년대는 격동의 연대’, ‘항후 10~20년은 우리 민족사의 분수령’이라고 막연하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12대 대통령 부임 이후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위기의 근거를 언급하기 시작한다. 『진해 특별회견(82/7/31)』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폴란드, 이란-이라크 전쟁, 이스라엘-레바논, 포클랜드 사태 등을 거론하며 80년대를 “언제 어디서고 또 어떤 문제를 놓고도 나라 사이에 충돌과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전화(戰禍)의 시대”, “북괴 이외에도 어느 세력, 어느 집단에 의해 언제 어디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협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문집 3』, 97)” 정세라며 위기의식을 최대치로 증폭시켰다. 그리고 1984년도 1월의 국정연설에서는 오늘의 “세계는 바야흐로 대전(大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형세(『문집 4』, 276)”라고까지 규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위기의식은 정권에 대한 저항의 강도가 거세질수록 함께 증폭되

었던 것이다.

1984년 후반기부터 집권 마지막 해인 1987년까지는 국제정세의 절박함을 언급하는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대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기의 근거로 동원한다. 「하계 특별기자회견(84/9/20)」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는 앞으로 4~5년(『문집 5』, 146)”이라고 하였다. 1986년의 「하계특별기자회견」에서는 올림픽과 정권교체를 앞둔 ‘앞으로 2, 3년’이 가장 위험한 고비, 1987년 1월의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의 금강산담을 거론하며 북한의 도발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문집 7』, 314)”이라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남침 위협’은 그의 재임기간과 겹치고 있다.

여기서 보듯 전두환은 강권통치를 동원하여 반대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던 집권 초기에는 주로 국제정세의 위협을 막연히 거론하다가, 저항이 거세지면서 국제정세의 위협을 ‘세계대전’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며 올림픽을 앞둔 북한의 무력도발을 위기의 근거로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직선제 개헌 요구가 폭발하던 1986년에는 국정연설을 통해 “작금의 세계는 흡사 1930년대의 대전 전야를 방불케 하는 경제전쟁의 파도에 휩싸여(『문집 6』, 287)”있으면서 국제경제의 위기의식까지 한껏 끌어올렸다.

전두환이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또 다른 수사법은 선진국 진입의 낙오였다. 이런 내용의 연설·담화는 집권 초기부터 나오지만, 특히 1985년부터 1987년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을 차단하는 명분으로 선진국 진입의 추락·낙오 수사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85년 국정연설」에서는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고 자신의 방침에 따라 국력강화에 단결함으로써 “세계사의 전면에 나서는 선두대열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낙오의 대열에서 세계사의 포말(泡沫)로 맴돌고 말 것인가(『문집 5』, 351)”, 「87년 국정연설」에서는 “민주와 번영, 그리고 선진과 통일의 밝은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또 다시 혼란과 빈곤과 퇴보의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느냐(『문집 7』, 300)” 등 반대세력을 차단하는 명분으로 추락·낙오의 수사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 부분에서도 그는 ‘앞으로 몇 년’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는데 1986년 8월 11일 「하계특별기자회견」에서는 ‘앞으로 2, 3년’, 즉 자신의 남은 임기를 “선진국에도 진입하는 데 결정적인 고비(『문집 7』, 149)”로 꼽았다. 담화·연설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면 임기 내내 그는 북한의 무력침공 위협, 임박한 세계대전, 경제전쟁, 민족의 운명을 가름하는 고비를 한꺼번에 맞아서 ‘구국의 과업’에 몸을 던졌던 셈이다.

3. 망국의 원인과 극복

전두환이 꼽는 망국·추락·낙오의 원인도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냉혹한 국제정세이며, 후자에는 국내 정치, 국민의 정신, 부정부패를 비롯한 사회문제가 포함된다. 앞에서 국제정세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내적 요인만 다루기로 한다.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자신의 집권을 ‘국가침몰의 위기극복’이라는 명분에 두고 있었음은 앞에서 보았다. 이러한 위기를 만들어낸 원인 중에서 그가 가장 격렬하게 비판했던 것은 ‘구 정치’였다. 그 역시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정치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부패와 사도(邪道)’, ‘선동·비리·파쟁·권모술수·부정부패 등의 폐습’으로 묘사하였다. 그것은 쿠데타를 정당화하면서 자신을 새로운 시대의 ‘국난 극복자’로 묘사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박정희와 다를 바 없었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역시 비슷했다.

전두환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망국의 원인은 국민정신이었다. 집권 초기부터 그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국민의 의식구조 자체가 바뀌어져야 한다’, ‘정신평토가 쇠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그동안 근대화 과정에서 빚어진 온갖 비리와 퇴폐, 물질만능과 출세지상주의 등 “도덕적 타락과 가치관의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고 나간다면 민족적 파멸을 초래하고 말 것임은 불을 보듯 분명한 일(『사회정화 국민운동 전국대회 유시(81/11/30)』, 『문집 2』, 310)”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그가 제시한 ‘새 시대를 여는 데 필요한 새 가치관’은 정직·검소·규칙 준수·배금주의 배척·근면 등 박정희 시대와 다르지 않았다. 특히 “국가 속에 내가 있고 나와 함께 국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겸허한 마음으로 생각(『문집 1』, 52)”하자는 11대 대통령 취임사(1981년)의 결론 또한 박정희의 국가주의 담론과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었다.

전두환이 국가생존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건전한 국민정신·가치관을 강조한 것은 박정희와 일치한다. 둘 다 ‘정신헌명’, ‘의식개혁’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일치하지만 전두환은 ‘국민성 개조’, ‘인간개조’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가장 큰 원인은 박정희와 달리 전두환은 ‘망국의 국민성’이나 ‘고질적 근성’ 같은 용어를 쓰지 않고, 우리 민족은 훌륭했다는 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민족성을 폄하하는 것은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이며

오히려 “자주성과 민족주의 정신이 우리 역사의 저변을 꾸준히 흘러왔다고(『서울신문 특별회견(80/11/21)』, 『문집 1』, 144)” 하였다. 그는 임기 내내 한국이 사대주의의 역사였다는 논법은 철저하게 부정하고 오히려 주변국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민족을 유지하며 살아온 강인하고 독립심 많은 민족, 독창적 문화를 창조한 문화민족, 저력이 강한 민족이라고 말했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 의도보다는 박정희와의 역사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박정희처럼 각종 사회문제를 국가생존의 위기로 확대하지는 않았고, 그에 따라 망국담론의 활용폭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좁아졌다. 전두환이 망국을 초래한 사회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주로 부정부패에 한정된다. 부패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를 쉽게 하며 “월남의 패망에서 보듯 …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고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진해회견(81/8/2)』, 『문집 2』, 214)”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두환이 국가생존의 직접적 위기의식을 환기시키면서도 박정희 정권보다 활용범위가 줄어든 이유는 몇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단임에 그치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사회 전체로 확대시키며 집권 연장을 피할 필요가 없었다. 둘째, 자신의 재임 기간을 성공의 시대로 평가해야 집권 초기 ‘국난 극복’의 이미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이 80년대 초의 위기를 극복하였고 특히 84년부터는 저금리, 저유가, 엔화가치 상승에 따른 저환율의 이른바 3저호황으로 인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나타냈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 할 나위 없는 호재였다. 셋째, 북한의 무력침공이나 적자생존의 냉엄한 국제정세 등의 명분은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면역력이 생긴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전두환은 그것을 대신 하는 담론을 개발하지는 못했고 망국 수사법의 활용 범위는 좁아졌다.

4. 미래

전두환은 집권 초부터 박정희 정권의 개발정책이 빈부 격차, 지역 격차, 부패 문제를 남겨놓았음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임기 내내 강조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국경 지표였고, 그렇게 해서 이룩되는 미래 한국의 모습은 민주복지국가였다. 5공화국에서 복지국가는 사실상 선진국과 같은 말이었으며 임기가 진행될수록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보다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전두환은 그 외에도 ‘부강한 조국, 위대한 조국’, ‘위대한 한국’, ‘선진기술공업국’을 미래 한국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결국 핵심은 ‘힘을

갖춘 선진국'으로 요약된다.

전두환의 연설·담화를 종합하면 선진국은 다음과 같은 나라로 나타난다. '골고루 잘 사는 나라', '국민 모두가 주인인 진정한 민주사회', '근면하고 정직·성실한 사람이 우대받는 정의로운 사회', '잘 살고 힘있는 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각 분야가 모두 균형있게 선진화된 나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 나라', '물질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이 동반되며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는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나라' 등이다. 그러나 이 정도면 이상국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V. 보수주의자들의 망국담론

노태우 정권을 제외하면 권위주의 정권의 위기담론에 가장 가까운 단어·수사·담론은 김대중 정권 이후의 한국 보수주의자들에게 가장 충실하게 계승된다. 한국 보수주의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김대중·노무현의 대북정책과 복지정책에 맞서 나름대로의 일정한 틀을 갖추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정립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과거 반공을 앞세우고 인권 탄압과 부패 등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 보수주의자들의 한계를 탈피하고 새로운 언어로 자신의 이념을 다듬었던 것이다.⁵⁾ 특히 뉴라이트는 시장경제·자유주의·민주주의의 가치의 존중이라는 항목을 도입하여 민주화 시대에 맞는 21세기형 보수주의를 내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보수주의 담론을 떠받치는 가장 근원적인 논리는 권위주의정권의 담론과 똑같은 망국의 위기意識과 선진국 진입이다.

한국 보수주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수적 자유주의는 한국 상황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개인보다는 민족·국가를 우선시하고 반공·경제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다. 이 보수적 자유주의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한 논리는 망국·생존·선진국의 담론이다. 21세기 한국 보수주의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다음의 두 문건이 잘 보여준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부국강병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개항 이래로 조선의 선각자들이 꿈꾸던 부강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데 성공(함재봉 2005, 213)” 했다는 주장,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불과 60년 만에 단군

5) 민주화 이후 보수주의의 특징에 대해서는 강정인·김현아(2006) 참조.

이래 최고의 부국강병을 이룩”했으며, 이것은 “한국의 우파인 자유민주주의 보수세력의 공로(김문수·조갑제 2009, 33)”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보듯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자신의 원류를 구한말 문명개화파에서 찾고,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를 건국·부국의 역사로 자리 매김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발전의 주인공은 보수주의자들이며 이승만·박정희를 비판하거나 한국 근현대사를 다른 시각에서 보는 진보세력의 언동은 “망국 행위(박근 2002, 78)”가 된다.

2000년 이후 망국담론은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데에 가장 활발하게 동원된다. 보수주의자들 역시 망국의 원인을 대내외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대내적 요인으로는 단연 ‘친북좌파’의 대북정책과 복지정책이 으뜸으로 꼽힌다. 그들에게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은 다 죽어가는 김정일 체제만 살려주고 주민은 굶주림과 인권말살 속에 방치해두는 정책일 뿐이다. 오히려 이 정책은 북한의 대남전략은 불변인 채 남한 내부의 좌우갈등을 일으켜 “내란적 상황을 야기(류근일·홍진표 2005, 204)”함으로써 마야흐로 “한반도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는 느낌(같은 책, 205)”이라고 위기의식을 한껏 고조시킨다.

망국을 초래하는 대외적 원인으로는 지정학적 요인과 치열한 국제경쟁이 꼽힌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기업경쟁과 국가의 시스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선진국 진입에 실패할 때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후진국으로 후퇴하게 된다(김정강 2002, 71)”는 주장은 과거 권위주의정권의 선진국 낙오 담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또한 “한국 경제는 지금 역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세계화를 통한 선진화가 하나의 길이라면, 그동안의 중진국 함정이 다른 하나의 길입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역사는 운명적인 선택을 강요하고(안병직·이영훈 2008, 310)”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 역시 결국 ‘지금 우리는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성장·낙오담론의 짙은 그림자를 볼 수 있다.

이처럼 국제경쟁에서의 승리를 국가 생사의 문제로 보는 보수주의자들에게 복지정책과 전교조·민중노총 등의 단체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이다.⁶⁾ 보수주의자들은 복지분배정책이 ‘발전의 원동력’인 경쟁 차단, ‘나태와 의존심리의 고취’, ‘국가경쟁력 상실’, ‘경제성장의 동력 상실’을 초래함으로써 한국의 선진

6)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앞두고 복지포폴리즘추방운동본부라는 단체는 ‘선진국 진입이냐 문턱에서 좌절이냐’이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다(2011. 8. 18 목격).

국 진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갑제·김문수는 “우리 정치가 선진화되는 게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는 지름길(김문수·조갑제, 334)”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들의 대답에서 정치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노무현 정권의 복지정책이었다. 그리고 전교조는 우리의 최악의 시스템인 평준화 교육을 지지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집단(조전혁·홍진표 2006)이며, 민주노총은 파업, 각종 친북행사, 이라크 파병 반대 등 “선진화의 걸림돌(이재교·김혜준 2007, 7)”이 되는 행동만 일삼으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집단으로 묘사된다. 구 보수주의자들이 이 단체들의 ‘좌익성향’을 공격했다면 뉴라이트는 여기에 국가경쟁력이라는 명분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중화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항상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으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류근일·홍진표, 256)”이라는 주장은 지정학적 요인을 중요하게 꼽고 있다. 지정학적 요소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논자들은 대미외교의 자주성과 자주국방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의 노선을 비판하며 친미노선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뒤쳐진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강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른바 외교역량을 “잘한 국가나 민족은 살아남았고, 외교고 뭐고 국제적 감각도 없이 마구 나간 민족이나 국가는 망한 거예요(류근일·홍진표, 255)”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교역량은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오래 전부터 보수주의 논객으로 활동한 양동안은 아예 직접적으로 “어느 나라에서건 우익이 침체하고 좌익이 번성하면 체제가 변형되거나 국가가 망한다. … 오늘날 이 나라에서 우익이 침체하고 좌익이 번성한다고 해도 체제변혁이나 국가멸망이 초래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양동안 2003, 452)”이라면서 친미의 이유를 망국에서 찾고 있다.

이 분야의 맹장 조갑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IMF 사태 + 6·25 전쟁 같은 상황을 부르든지” 아니면 보수와 ‘친북좌익’의 “내전을 통해 … 피를 부를 것이고 동북아의 혼란을 유발할 것(조갑제 2003, 141-42)”이라면서 그 특유의 주장을 펼쳤다. 심지어 한 논객은 중국·일본·러시아 등의 한반도 주변의 나라를 “우범지역을 어슬렁거리는 불량배”, “언제든지 조폭으로 돌변할 수 있는” 깡패로 묘사한다. 그리고 이들의 폭력성이 드러난 사례를 구한말에서 찾으며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은 좋은 친구를 항상 가까이 두는 것이 생존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김영호 2008, 99)”고 주장했다. 이것은 지정학 요소와 구한말의 상황을 동원하여 위기의식을 환기시키고 친미를 생존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야 할 한국의 미래를 선진국으로 제시한다. 구 보수주의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제일 강조했다면, 21세기형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이른바 ‘뉴라이트’의 담론에서는 선진국의 희망이 가장 두드러진다. 보수주의자들의 선진국 진입론은 “나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8~9퍼센트를 회복해서 내가 죽기 전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김정호 2005, 186)”는 주장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그에게 선진국은 개인의 사무친 열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김호진에게는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선을 넘어 경제 9강(G9)에 끼는 것이 국민적 염원(김호진 2003, 78)”이 된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의 21세기 목표는 응당 선진국 진입(신지호 2006, 189)”이라고 말하는 뉴라이트 논객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국가적 목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보수주의자들은 입을 모아 ‘선진국’, ‘세계 일류국가’를 외치면서도 선진국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그저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높고, 환경도 깨끗하고 부패도 없다(김정호)’, 혹은 “경제가 넉넉하면 마음이 넉넉해진다. 마음이 넉넉해지면 사회적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거나 줄어든다(김호진, 79)” 것이라면서 막연하게 선진국을 언급하는 논자들이 보일 뿐이다. ‘일류국가를 소망’한다는 제목으로 대담을 펼친 조갑제·김문수의 책을 비롯하여 그 밖의 뉴라이트 문건에서도 선진국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선진국을 달성하는 수준도 다르다. 김정호는 2만 달러, 신지호는 3만 달러, 안병직·이영훈은 2006년 가치로 3만 달러, 조갑제·김문수 대담에서는 4만 달러로 나온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망국담론이 국가주의와 긴밀하게 결부되었듯 보수주의자들 역시 국가주의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조갑제가 만든 ‘국민윤리현장 10대 항목’에는 ‘국가관’이라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지연, 학연, 혈연, 특정집단(계층)의 이해관계보다도 국민의 전체 이익, 즉 국익이 우선임을 확인(조갑제 2001, 321)”한다는 것인데, 뒷부분에는 국민·국가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인권은 국권 없이는 지켜질 수 없다(같은 책, 323)”는 항목도 있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를 국가생존이라는 명분으로 제한했던 권위주의 정권의 국가주의 담론을 연상시키고 있다.

국가주의의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뉴라이트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진보 측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저질렀던 인권탄압과 폭력을 건국·부국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뉴라이트 역시 국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 이영훈은 자신은 단지 국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며 결코 국가주의자는 아니

라고 대답한다(이영훈 2007). 사실 이영훈은 국가의 중요성을 ‘문명사’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을 뿐 ‘국가를 위해 개인은 희생해야 한다’는 식의 국가주의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근현대사를 건국과 부국이라는 문명사의 차원에서 평가하며 우파의 분단·부국강병·국가폭력을 옹호하는 그의 글(이영훈 2006)이 국가주의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인이 지켜야 할 가치를 ‘헌법 정신’으로 꼽고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로 요약한 뉴라이트 논객들 역시 자신들이 국가주의자라는 비판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결국 내 개인의 행복추구, 즉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거잖아요(이석연·강경근 2006, 124)”라는 식으로, 즉 편협한 사적 이익과 정당한 국가 이익 사이의 문제로 몰고 가는 태도를 보여주는 한,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 보수주의는 물론 21세기의 뉴라이트 역시 망국·선진국 담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 수사법을 활용한 망국담론은 일차적으로 한국 보수주의자에게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왔던 세력이며 ‘세계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룩한’ 한국을 만든 지도적 이념, 앞으로도 지켜야 할 이념이라는 명분을 제공해주었다. 그것은 자신이 독재정권의 협력자나 시류에 영합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망국의 아픔을 딛고 후손들에게 ‘영광된 조국의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려 노력한 중추세력이라는 ‘애국’의 후광을 마련해주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보수주의자들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지지자들을 동원할 때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신의 한국 근현대사 해석, 강경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이념이나 세력은 ‘망국의 이념’이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망국의 집단’으로 매도한다. ‘망국 세력’과의 경쟁은 단순한 학문적·정책적 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또 다시 망국의 늪에 빠뜨리려는 친북좌익세력’들과의 ‘생사를 건’ ‘애국·구국의 투쟁’으로 그 의미가 격상된다. 한국에는 보수주의자 아닌 ‘애국자’란 있을 수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극단적인 언어로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공포심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VI. 망국담론이 만드는 한국의 정치현실

지금까지 보았듯 역대 권위주의정권과 보수주의자들이 현대 한국정치를 이끌어왔던 밑바탕에는 망국담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망국담론은 구한말의 국권상실과 6·25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국제경쟁에서의 패배 = 망국’, ‘반공과 국가안보의 해이 = 망국’이라는 등식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을 항상 위기의식 속에 묶어두고 정권에 의한 국민 동원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이승만 정권에서 이 위기의식은 반공의 기반으로 활용되었으며, 박정희 정권에서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 밑바탕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서는 국가안보 강화와 선진국 진입론의 기반으로, 2000년 이후 한국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의 토대 역할을 했다.

구체적 내용과 정치적 목적은 다르지만 결국 이 담론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국가가 망한다’ 혹은 ‘경쟁에서 주저앉는다’는 위기의식을 불어넣음으로써 국민동원을 용이하게 만들고 권력에 대한 국민의 순응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게다가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망국의 수사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라는 민족주의 담론과 쉽게 결합됨으로써 대중의 정서를 장악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국가와 민족의 위기’, ‘국가발전의 중대한 계기’로 인정받게 되면 IMF 위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이나 ‘동계올림픽 유치’에서 보듯 폭발적인 대중동원력을 발휘한다. 이것이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 중의 하나였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국의 정치현실과 정치언어를 거칠게 만들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적개심이라고 표현해도 좋은 태도를 만들어내는 등 여러 부정적 측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망국의 수사는 자신의 주장에 장중한 ‘애국적’ 후광을 부여하며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과의 합리적 토론을 차단 혹은 배제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 즉, ‘구국의 결단’, ‘민족의 존망 앞에 선 갈등’, ‘역사 앞의 고뇌’라는 수식으로 포장하여 자신에게 애국·구국의 후광을 주입함으로써 스스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면 더 이상의 합리적인 토론은 필요 없게 된다. 종교적 근본주의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이러한 인식에 사로잡히면 ‘생사를 건 대결’ 같은 극단적 언어를 동원하여 정치를 투쟁의 장(場)으로 만들고 정치언어를 원색적 비방으로 물들이게 한다.

둘째, 망국의 담론에서는 발화자가 생각하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동의하지 않는 사

람들은 국민이나 민족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존재이다. 이들은 단순히 국내정치의 혼란을 가져오는 무리가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더욱 강도 높게 비판되며, 더 나아가 척결·단죄·말살·제거 등의 격렬한 용어를 동원하여 법적·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된다. 해방 이후 우리의 정치사에서 나타난 인권유린과 집단학살, 예를 들면 보도연맹을 비롯한 좌익 혐의자 학살, 6·25 전쟁 중의 민간인 학살, 각종 간첩사건과 ‘혁명당’ 사건 관련자의 처형,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나 노동운동가에 대한 용공 조작이 보수주의자들에게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이유도 그들이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위협롭게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뿌리 깊은 선입견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셋째, 국제적 측면에서 한국인에게는 한반도 주변국들이 모두 잠재적 적이나 경쟁 상대로 인식되고 상대방이 잘 되면 그것을 곧 나의 손해로 보는 제로섬 게임의 인식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북한·중국·일본과의 공동 발전을 통한 평화공존이나 국제연대보다는 한국이 제일 ‘강해져’ 우위에 있어야 주변국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생존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혹은 ‘태평양 공동체’의 국제연대 발상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망국담론에 길들여진 한국인의 관심은 한국이 그 안에서 맹주 혹은 소맹주의 위치를 차지하며 얼마나 이익을 거둘 수 있느냐에 집중되어 있을 뿐 동아시아의 평화나 협조 같은 그 본래의 관념에 대한 이해도는 지극히 희박한 실정이다.

넷째, 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지배담론, 공식 교육과정, 언론, 대중매체를 통해 이러한 위기와 생존의 담론을 계속 접해왔던 한국인에게는 이 위기의식이 어느덧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운영 시스템’의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인의 일상 대화 속에서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수사는 정치인·일반인·학자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대화주제와 관계없이 가장 빈번하게 동원되고 있다. 정치권력이나 대중매체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위기’라는 이름을 부여하면 정책의 관점에서 득실을 따지며 차분하게 접근하지 않고 ‘국가존망’의 관점에서 격렬한 상호비방이 난무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4대강 개발’이나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망국·개조·선진국의 수사법은 한국사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강한 자장(磁場)을 이루며 한국인의 정치의식을 협소하게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

VII. 결론: 한국 현대정치사의 사상화 작업을 위한 실마리

지금까지 필자들은 역대 대통령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정치의 현실을 규정하고 풀어가는 가장 근원적인 언어로서 망국이라는 일상의 단어를 포착하여, 그것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사상화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였다. 망국이라는 단어는 서구 정치사상의 문제들이나 개념 분석에는 해당하지 않는 한국의 일상적 언어이지만, 국권상실·분단·전쟁을 겪으며 한국인의 뇌리에 확고하게 각인된 ‘생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며 한국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로 작용하여 왔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또한 개화기 이후 한국에 수용된 서구 정치사상이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현실 속에서 변화되고 현재의 독특한 모습을 갖추게 된 원인을 밝혀주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 서구 정치사상은 외세에 의한 정치공동체의 생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국에서 받아들여졌고, 그 어떤 이념도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지배적 정치이념으로 존재했던 자유주의가 보수적 자유주의라는 한 갈래로 전개되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생존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의 보수적 자유주의를 서구 원산지 자유주의로부터의 일탈이나 왜곡이 아니라, ‘생존’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던 한국의 상황에서 비롯된 자유주의의 또 다른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보수주의를 단순히 기득권 세력의 이념이 아니라 한국인, 특히 국권상실·분단·전쟁을 겪으며 그 누구보다도 국가와 개인의 생존을 절감했던 구세대의 역사적 경험을 정치언어로 재구성해준 이념으로 보게 해줌으로써 보수주의가 발휘하는 힘의 근원을 포착할 수 있다.

필자들은 한국 사회구성원의 삶과 연계된 정치적 근본 언어·담론에 대한 분석이 현대 한국정치의 사상화 작업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작업은 현대한국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급진주의, 민족주의 등의 정치이념과도 연결되고, 시기적으로도 넓게 확대되어야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들은 그 예비 작업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대통령 연설·담화, 그리고 2000년 이후 한국 보수주의를 통해 한국의 보수적 자유주의가 국가생존의 담론을 통해 변화·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루는 시대도 좁고 정치이념도 한정되지만 이러한 예비 작업을 발판으로 한국 현대

정치사상을 떠받치는 기본 틀과 문제의식의 지속성을 파악한다면, 우리의 지나온 정치현실을 개념화하는 작업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고일: 2011년 7월 21일

심사일: 2011년 8월 3일

게재확정일: 2011년 8월 30일

참고문헌

- 강정인. 2004.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 강정인·김현아. 2006.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보수주의.” 『사회과학연구』 14집 2호, 6-43.
- 강정인. 2007. “한국 정치사상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과학연구』 15집 2호, 8-48.
- 김문수·조갑제. 2009. 『나는 일류국가에 목마르다』. 서울: 북마크.
- 김영호. 2008. “건국사관과 분단사관.” 김영호 편.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 75-100, 서울: 기파랑.
- 김정강. 2002. “한국의 우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월간조선』 6월, 64-71.
- 김정호. 2005. “한 보수주의자의 보수 비판.” 박효종 외. 『한국의 보수를 논한다』, 146-88. 서울: 바오.
- 김호진. 2003. “전 노사정위원장의 경고.” 『월간조선』 8월, 73-79.
- 류근일·홍진표. 2005. 『지성과 반지성』. 서울: 기파랑.
- 박근. 2002. 『한국의 보수여 일어나라!』. 서울: 월간조선사.
- 박정희. 1962. 『우리 민족의 나갈 길』. 서울: 동아출판사.
- _____. 1969. 『박정희대통령선집』 1~9권. 서울: 지문각.
- _____. 1973~78.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3~6권. 서울: 대통령비서실.
- _____. 1979~80.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5, 16권.
- _____. 2002. 『나라가 위급할 때 어찌 목숨을 아끼리』. 서울: 동서문화사.
- 신지호. 2006. 『뉴라이트의 세상 읽기』. 서울: 기파랑.
- 안병직·이영훈. 2008.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 서울: 기파랑.
- 양동안. 2003. “내 지식들부터 우익운동가로 만들어야 한다.” 『월간조선』 10월, 446-55.
- 이석연·강경근. 2006. 『헌법과 반헌법』. 서울: 기파랑.
- 이영훈. 2006. “왜 다시 해방 전후사인가.” 박지향 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25-63. 서울: 책세

상.

이영훈. 2007. 『대한민국 이야기』. 서울: 기파랑.

이재교 · 김혜준. 2007.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 서울: 시대정신.

전두환. 1981~88. 『전두환대통령연설문집』. 서울: 청와대비서실.

조갑제. 2001. 『이제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된다』. 서울: 월간조선사.

_____. 2003. 『벼랑에 선 대한민국 우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월간조선사.

조전혁 · 홍진표. 2006.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서울: 기파랑.

함재봉. 2005. “보수주의와 현실주의.” 박효종 외 편. 『한국의 보수를 논한다』, 189-214. 서울: 바

오.

ABSTRACT

The Fundamental Language of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Crisis of the State, Reform of the State, and the Advanced Country

Jung In Kang | Sogang University

Seung Hyun Jung |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fundamental language which has constructed and shaped the basic scenes of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and to trace how it has affected the discourses and the reality of Korean politics since 1960s. We explored how the language, the crisis of the state, has been used by two authoritarian regimes (Park, Chung Hee and Chun, Doo Hwan) and Korean conservatists of the 21st century, as these two groups have repeatedly exploited the crisis of the state discourses to legitimize their political positionings and to mobilize Koreans. These discourses have dominated the basic contents of Korean political language, shaped the certain aspects of political mentality of Koreans, and eventually influenced the politics of Korea both negatively and positively since 1960s. We especially explained the details of the discourses, their political functions and their usefulness. We also sought to show what has made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thought unique, and what needs to be made to conceptualize the political experiences of contemporary Korea beyond Eurocentrism.

Keywords: crisis of the state, reform, advanced state, authoritarianism, conservatism